

28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의 ‘민란’

이 나 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의 '민란'

이 나 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01

들어가며

2016년 거대한 촛불의 물결과 그것이 이룩한 정권 교체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세계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현 상황에 “한국은 민중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방금 전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감동적인 이야기’인 까닭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독재정권을 갖 80년대 말에 민주주의로 교체한 나라란 점에서 그렇다”고 평했다. 1987년을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된 해로 보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본다.¹ 김대중은 1986년 9월 하버드대학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지금 망명까지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민주주의는 서구 사회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민주주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 질문은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또한 많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시장주의가 힘을 얻고 금융자본이 판을 치며 정치적으로

1) 그와 같은 ‘민주주의 외삽론’에 대한 비판은 김정인(2018) 참조.

2) 이에 대해 김대중은 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유산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 근거로 첫째, 동학의 인내천 사상, 둘째,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 셋째, 유교의 민본주의를 들었고, 또한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향후 민주적 시민성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김대중 2011). 이는 당시 아시아적 가치와 발전모델을 논하며 민주주의는 서구의 가치로서 아시아 국가는 나름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주장한 리관유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김대중은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 즉 나무, 풀, 동물, 물고기, 날짐승, 공기, 흙 등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김학재 2017, 74-75). 이는, 당시 개발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그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동학의 경물사상이 현대의 생태민주주의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로는 우경화의 위험이 커져가는 현 상황에서, ‘홀로 빛나는 민주주의’를 보여준 한국이, 과연 서구의 가르침으로 민주주의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의문을 세계가 갖기 시작했으며,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8년 6월 7일 “한국 민주주의 100년, 세계적 물음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보고자 한 것이다. 3.1운동 후 제정된 임시헌장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고 마침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면 1919년에 민주공화국에 대한 합의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 그 이전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 ‘민주적’ 신념에 대한 공감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필자는 이에, ‘민란’에 주목하고자 한다. 흔히 아시아민주주의를 논할 때 유교의 민본사상을 언급하는데, 이는 지배층이 민에게 가르친 이념으로, 만일 그것이 세상을 뒤엎을 위험한 사상이었으면 그들이 가르칠 리가 있겠는가 묻고 싶다.³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민란은 어지러운 것, 소요, 혼란이며, 폭동을 유발하는데 어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난(亂)’은 다스림(治)을 의미하기도 한다. “백성의 다스림은 옥사의 양사(두 말)를 알맞게 듣지 않음이 없으니(民之亂 罔不中聽獄之兩辭 『서경 권10』)”라는 구절에서 ‘난’은 ‘다스림’으로 해석된다.⁴ 직접적으로, 채침(蔡沈)은 ‘난치야(亂治也)’라고 하여 ‘난은 다스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흥경래의 난은 흥경래의 다스림이며 민란은 민의 다스림, 민치, 즉 데모크라시인 것이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일본에 의해 ‘민주주의’로 번역되었는데, 본래는 ‘민주정’, ‘민주제’를 뜻하는 것으로, ‘민의 지배’란 측면에서 ‘민치’란 개념이 더 정확하다. 또한 민란은, 현대 한국사회의 민주항쟁이 그러했듯이 대체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물론 폭력이 뒤따르기도 했으나 그것은 대체로 가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응징의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민란이 일어난 시점을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1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기간을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은 결국의 ‘소요’란 점을 주장한다면, 서구의 데모크라시 역시 ‘다수파가 소수파에게 행하는 잔인한 압제,’ ‘민중이 자행하는 박해’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고대 그리스에서 데모크라시는 저급한 정체로 여겨졌으며 보수주의자 버크는 그것을 민중의 압제로 보았다. 현재까지도 하이에크 등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법치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도 데모크라시의 오명은 민란이 받아온 오명과 흡사하다.

3) 단, 민란의 주역들이, 민본을 지키지 않는 지배세력을 비판하는 논리적 무기로 민본사상을 내세울 수 있는 있다.

4) ‘양사(兩辭)’는 ‘양쪽의 말’로서, 쌍방의 말을 모두 들어서 치우침이 없으면 다스려진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반면 ‘단사(單辭)’란 ‘한쪽의 말’로서, ‘증거가 없는 말’이며 따라서 단사만 들으면 다스리기 어렵다(채침, 『서경집전』).

02

민란이 일어나기를 바란 백성들

엘리트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민주주의가 야만적이고 위험하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러한 것인가. 권력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그러한 것일 것이다. 민란도 마찬가지다. 지배자가 아닌 민중에게 민란은 오히려 '바라는 바'였으며 세상이 바로잡히는 과정이었다. 1890년대에 "동서남북의 여러 읍들"은 난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서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배항섭 2008, 36).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왜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였고, 혹은 길게 탄식하기를 '어떤 좋은 운수라야 난리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황현, 『오하기문』) "촌촌마다 곡성이고, 사람마다 원성"이었고, 관리, 양반, 부자들은 백성을 어육으로 보았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을 원수로 보았다. 그들은 "백성의 힘으로써 살면서도" 도리어 백성들을 못살게 하니 말끝마다 "이 나라는 망한다. 꼭 망하여야 옳다. 어찌 얼른 망치 않는고"하며 날마다 망국가(亡國歌)를 일삼았다(오지영, 『동학사』; 우윤 2003, 17).

고부민란 때 사발통문이 돌자 사람들은,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라고 말했다(정창렬 1985, 101-103).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난리의 어지러움이 아니요 평상시의 관의 횡포였다. 재판에서 왜 민란을 일으켰냐는 질문에 전봉준은 "못 백성이 원통해 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려고," 또한, "세상을 건지려는 목적"에서 했다고 답했다(전봉준공초; 정창렬 1985, 125). 백성들은 언제 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고종시대 충청도 감사 조병식은 백성들에게 억지로 동학이라는 혐의를 씌워 재물을 빼앗았다. 돈이 있는 백성이면 재산을 다 털리고서 풀려났고 재산이 없으면 죽거나 형배를 당했다(취어; 정창렬 1985, 121).

난이 일어나고 나서도 관군이 오히려 반란군에 비해 더 폭력적이고 두려운 존재였다. 흥경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소집된 관병들은 정주성을 포위한 후 성을 공격하기보다 민간인 약탈에 더 주력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군막 안에 쌓아두었으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다. 이에 백성들이 날마다 호소하러 군문에 와서 문이 메워질 지경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가산군수 등에 의해 보고되어 각 진에 내려진 전령에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관군의 약탈로 인해 백성들이 반란군을 따라 정주성에 따라 들어갔고 이들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여 홍경래난이 지속되었다(관서평난록; 최미정 1993, 21). 동학농민혁명 때 고부 안핵사 이용태의 역졸들도 “온 고을에 퍼져 마을에 횡행하면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생선꺾미같이 포박하니 온 고을 백성의 원한이 골수에 맺혔고” “기포 인민을 모두 동학이라 일컫고 이름을 열기하여 잡아들이고 그 집을 불태웠다.” 또한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자를 잡아들이고 살육을 감행하였다.”(전봉준공초; 정창렬 1985, 115) 이는 제주4.3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03

민치(民治)로서의 민란

법과 제도가 질서이고 난리가 혼란이라는 기존 관념과 달리, 위에서 보았듯이, 법과 제도를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난은 반드시 혼란만은 아니요 절차와 질서, 또한 전망을 갖기도 했다. 홍경래난 거사일에 홍경래의 연설과 한글로 된 격문이 발표되는데⁵ 그 내용에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부정부패가 숙청된 질서”에서부터 신왕조 건설까지 있다(최미정 1993, 15). 홍경래난은 서북지방에 대한 오랜 차별과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 준비기간만 10년이 걸린 치밀한 거사였다(최미정 1993, 12). 물론 홍경래난은, 민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란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최미정 1993).⁶ 그런 이유에서 민란이 아닌 홍경래의 난으로 불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난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므로 ‘백성들이 바라는 난’이었다(최미정 1993, 17). 홍경래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만큼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 백성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천영의 ‘난’도 신천영의 ‘통치’였다. 신천영은, 반란을 일으킨 이인좌가 청주성 점령 뒤 청주부사로 임명한 인물이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는 악질 관리를 처단하고 노예를 해방했으며 곡식을 풀어 백성을 먹였다(최미정 1993, 25-26). 이 난으로 인해 공주로 피난간 한 양반에 의하면, 반란군들이 농민에게 베풀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 사란(思亂)의 민(民)과 원국(怨國)의 도(徒)가 모두 흥이 났다고 했다. 그리하여 기세가 날로 커지고 늘어나는 반란군은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했다(술란록; 이종범; 최미정 1993, 26).

민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용어가 아닌 것일 수 있다. 1862년 단성민란의 지도자 김령은 민란이란 용어를 스스로 사용했다(방용식 2017, 220). 또한 난을 일으킨 주모자들은 ‘이인(異人)’이나 ‘진인(眞人)’으로 불렸다. 이들은 초인적인

5) 격문이 한글인 것은 그것을 읽을 사람이 일반 백성이었음을 의미한다.

6) 조선 후기 변란의 주체는 대체로 잔반들로서 지사(地師), 훈장, 의원(醫員) 등이었다. 그러나 그 중 천민 출신도 있었다. 정조 6년 서울을 공격할 거사를 모의한 문인방과, 정조 9년 지리산 모의에 참여한 주형채와 오도하는 천민 출신이었으며, 순조 19년 화성패서의 주역 김재묵은 관노 출신이었다(고성훈 2007, 141-142).

능력을 갖고 있어 ‘함께 일을 하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순조 26년 청주변란의 주역 정상채와 고종 5년 정덕기도 신기한 능력을 갖춘 이로 전해졌다(고성훈 2007, 143).

민란은 실제로 민치였다. 즉 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민란이 일어난 지역의 경우 대부분 민들이 지방관을 축출하고 관리들을 새로 임명하는 등 독자적으로 읍권을 행사했다. 통치의 주요 행위인 세금을 걷는 일도 했다(배항섭 2008, 35). 그리고 그 통치는 나라가 행한 것보다 더 민주적이었다. 단성에서 일어나 민란 때 수개월동안 민중들은 관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매일 향회가 열어 모든 읍정을 직접 자치적으로 처리했다. 성주에서도 “소위 향회가 없는 날이 없이 500~600명이 항상 모여 소란을 피운다”고 언급되었다(임술록; 안병욱 1987, 170-171).

거리에서 주고받으며 하는 말이, ‘수령이나 감사는 무력하고 고식적이어서 탄원해봐야 효과가 없으니 분을 풀고자 한다면 읍회만한 것이 없다’고들 한다. 무명의 하찰은 자의 한마디 외침에 만 사람이 호응하고, 군중이 모여들어 변란을 일으킨다(승정원일기 철종 13년 8월 9일; 안병욱 1987, 171-172).

천민들도 민란에 대거 참여했다. 때로는 노비들도 공론과정에 참여했으며(배항섭 2013b, 329-330), 동학농민전쟁에서 천민부대가 별도로 있었다(배항섭 2013b, 338). 사족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민이 그를 추대했을 때이다. 그는 지도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며 민의 의사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축출되기도 했다(배항섭 2013b, 328). 고부민란에서는 호장, 이방, 군교 등 관속층과 좌수 등 향임도 참여했으며, 민란군은 동장, 집강, 향임 등의 향촌 자치기구에 의해 조직되었다(정창렬 1985, 117).

공론 형성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소장을 올리기도 했다. 제주 이재수의 난에는 무녀, 기행, 첩 등 하층 여성이 적극 가담했다(배항섭 2013b, 329-330). 동학농민전쟁 신례원 전투에서 관군의 밥을 해주던 노파가 농민군에 내응하여 관군이 잠든 사이에 포신에 물을 붓고 도망친 일화도 있다. 다음날 관군이 포를 쏘자 포문에서 포탄이 아니라 물이 나왔고 이때부터 “동학군은 호풍환우의 술(術)이 있어서 능히 대포구멍에 물이 나게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동란잡화” 『신인간』 1 1926; 배항섭 2013b, 339). 동학농민전쟁 당시 장흥 전투에서 농민군을 지휘한 이는 이소사라는 여성이었다. 그는 “일찍이 꿈에 천신(天神)이 나타나 오래된 제기(祭器)를 주었다고 하며, 동학도가 모두 존경하는 신녀(神女)가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장흥의 민인(民人) 등이 잡아 바친 여자 동학은 그들이 ‘신이부인(神異夫人)’이라 일컫는데, 요사스런 말을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한 일대 요물인지라 이달 초1일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진영 대대로 압송”했다(국민일보; 양호우선봉일기; 배항섭 2013b, 338). 일본 측은 이

여성을 정신착란자로 결론 내렸지만 그가 농민군이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를 지도자로 보진 않았지만 그를 “동학도들이 옹립해서 천사(天使)로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배향섭 2013b, 339). 일본 측은 그의 지도력과 신성성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했고 허벅지살을 베어내는 등 모진 고문을 가했으며 다른 동학지도자와 달리 오랜 기간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04

민란의 조직적 · 민주적 전개

민란의 전개과정 역시 어지러운 것이 아니었고 조직적으로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시작은 자발적 · 자연발생적이었고 그 과정은 대개 발통-취회-등소를 거쳐 봉기가 이뤄졌다(고성훈 2007, 146). 함덕농민항쟁의 경우, 토호 이정규의 악행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이 이로 인해 흥주목에 등소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안 이정규가 등장에 나선 농민들을 모두 죽이라는 서신을 흥주목사에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하고 징을 쳐서 농민을 불러 모았는데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박결순 2007). 함창농민항쟁도 주민들이 관남지라는 못의 준설을 위해 동원됐는데 그 일이 힘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중 문창리 주민들은, 못 준설을 반대하는 등장을 올리자는 논의를 시작했고 주민 수십 명이 등소를 위해 관아로 가는 도중 준설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주민들과 주막에서 합류하면서 가담 지역이 확대되었다. 논의 내용도 준설문제 뿐만 아니라 결세의 추가부담 문제까지 확대되었고, 통문이 작성되어 각 면, 각 동에 보내지면서 함창 전체 주민이 가담하는 민란으로 확대되었다(송찬섭 2002; 배항섭 2014, 107). 진주민란은, 항쟁지도부가 형성되고 나서 농민대중이 면 · 리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읍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읍을 넘어 감영, 병·영, 선무사와 협상을 벌였다(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최미정 1993, 35). 고부민란 때에는 “가맹한 촌락 15개, 전군 1만여 인, 먼저 장정을 뽑고 노소인(老少人)들은 모두 돌려보내었으며 장정들을 통솔하는 자는 매 촌락마다 5명이었다.” “사방의 이웃 고을에서 모두 동정을 표하였”고, “악평을 하는 고을이 없었다.”(『전라도고부민요일기』; 정창렬 1985, 116)

단성민란의 주모자 김인섭은 민란이 일어난 1862년 2월 4일, 그의 일기에, “향회가 열렸다”라고만 적었다. 즉 난민들 스스로는,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향회를 연 것으로 생각한 것일 수 있다(안병욱 1987, 170). 민란은 대개 백성들이 통문을 돌리고 향회를 열면서 시작됐는데(배항섭 2008, 35), 배항섭에 의하면 향회는 부세제도의 운영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의 향회와 다른 논의기구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세부담의 말단 단위인 면과 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이회와 동회가 점차 상시적인 논의기구가

되어갔다. 이회는 권농, 훈장과 이임, 좌상, 두민들, 대소민인들이 모두 모여 마을 차원의 민의를 수렴했다. 면임까지만 관에서 차첩을 주었고 동임은 이회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양반이 주도하는 동계가 활발한 곳을 제외하고는 마을 주민들의 이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선출되었다(배항섭 2014, 108). 주민들은 읍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론을 위임하기도 했다. 대체로 그 과정을 보면 백성들은 공론을 모은 후 전곡을 추렴하여 대표를 내세우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위임하여 상경시켰다. 이들은 대결문에 가서 직접 호소했으며 이후에도 수령과 감사에게 누차 정장을 올렸다(배항섭 2013b, 329).

집회 때 주민들은 면과 리의 이름을 쓴 깃발을 들고 참여했다. 이는 민란 참여 여부가 동, 리, 면 단위의 공론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배항섭 2013b, 327). 1894년 고성민란의 경우 주민들이 교혁안민(矯革安民)이란 깃발을 내걸고 스스로의 집회를 '민회소(民會所)'라고 불렀다. 이들은 관리의 부당한 세금 징수에 반발하여 그 돈을 조사하고 환징하고자 했다. 수령은 이를 받아들여 사실소(查實所)를 마련하고 민회소 대표와 좌수, 공형, 아전들이 모여 문부를 조사했다. 또한 주민들은 부당 징수의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해온 향회를 '영원히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배항섭 2014, 114).

민란의 발단이 된 집회는 민회, 민소, 민회소, 이회, 면회, 읍회 등으로 불렸고 향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참가층이나 성격 면에서 거수기 역할을 주로 했던 기존 향회와는 다른 것이었다(배항섭 2013b, 327). 동학도들은 자신의 척왜양집회가 민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집회에서는 촌척(寸尺)의 병기도 휴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민회이다. 듣기에 각 국에도 역시 민회가 있어서 조정의 정령 가운데 민국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회의하여 강정(講定)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인데 어찌하여 비류(匪類)라고 지목하는가?(취어; 배항섭 2013b, 336).

05

민란의 ‘준합법적’ 성격

수령이 주민들의 뜻을 듣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집단 상경하여 국왕에게 직소했다. 이것도 어려워질 경우 주민들이 채택한 가장 격렬한 방법이 민란이다(배항섭 2014, 110). 따라서 민란은 공론 전달의 마지막 절차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들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소용이 없을 때 난을 일으켰다. 불법을 자행하는 조병갑에게 전봉준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구금당했다. 이어 고부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봉준은 재판에서 “학정은 처음부터 행하였는데, 왜 즉시 기포하지 않았는가?”라는 법관의 물음에 “온 고을의 인민이 참고 또 참다가 종말에는 더 참을 수 없어서 기노(起鬧)하였다.”라고 답했다(정창렬 1985, 108-109). 황현은 “백성은 모두 덕을 따르고 의를 외경하여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되고서야 민란을 일으킨다.”고 했다(정창렬 1985, 112).

왕들도 민란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1894년 고종은 각도 군읍(郡邑)의 백성들에게 ‘탐묵한 자들의 침학’으로 인한 민란은 ‘반드시 부득이한 것’이라는 윤음을 내렸다. “혹은 탐묵한 자들의 탐학에 곤궁하여 그 산업을 잃고 유랑하거나 이산하여 이미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없게 된 즉, 문득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고 관장을 억누르니 무릇 백성된 자들이 어찌 명분을 범하고 기강을 어지럽힘이 중죄가 됨을 몰라서 기꺼이 저촉하고자 하겠는가. 반드시 부득이한 것이니라”고 했다(일성록; 박결순 2007, 32). 또한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박탈(剝削)을 견딜 수 없어 오늘날의 모양에 이르도록 한 것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더욱 원통하고 한탄스럽다. 탐묵은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일성록; 정창렬 1985, 114).

민란의 이러한 ‘준합법적’ 성격은 민란을 대하는 관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새로 부임한 고부군수 박원명은 민란군에게, 자신의 목적은 “오로지 백성을 휴양케 하는 데”에 있으며 민란군과 “이 고을의 시정을 의논하고자” 하니 “민군 중에서 이부(吏部) 이하의 간부를 선발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해(정창렬 1985, 111-112) 민군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민란군과 시정을 의논했으며 “3월 3일에는 음식상을 크게 차려 놓고 난민을 초대하여 조정에서 농민군들의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 농사짓고 편히 살 것을 허용하는 뜻으로 타일렀다.” 그러자

농민군은 모두 일단 해산했다. 『전봉준실기』에 의하면 “박 군수의 간곡한 효유에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정창렬 1985, 113).

임술민란 등 민란이 일어나 봉기군이 성지를 점령할 때에도 관군이 곧바로 무력으로 탈환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농민군은 얼마간 읍정을 장악했다가 스스로 물러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농민군은 대규모일 뿐 아니라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있어 선불리 물리적 충돌을 감행하지 않았다. 진주민란의 경우 3명만이 효수형에 처해졌다(고성훈 2007, 146, 148). 고성 주민들은 심지어 고성부사 오횡목이 주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자 그를 민회소의 장두로 삼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오횡목은 민회소를 비난하는 향리의 간언을 물리치고 민란의 책임이 향리에게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배향섭 2014, 118).

민란의 이러한 타협적, 준합법적 태도를 소극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학도들이 군주제를 인정했다 하여 동학혁명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대해 성찰할수록 근대라는 개념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정치학’적으로 또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사고한다면 군주 내지 군주제의 인정이 근대성, 민주성과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님을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1운동 지도자들이 독립선언 당시 낯술을 했다는, 불필요하고도 비본질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지도자들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 비롯된 것이다. 손병희 재판기록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왜 공공장소에 나아가지 않고 요릿집에서 선언을 했는지 이유가 드러난다.⁸ 독립선언의 내용과 행위에 대해 조선, 일본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고, 비폭력적, 합법적, 정당한 것임을 부각시키며 또한 이에 대해 일제가 어떤 다른 사소한 법적인 트집을 잡아 그 뜻을 깎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또한 이는 민중 뿐 아니라 온건한 중간층과, 피억압계층에 호의적일 수 있는 엘리트층의 지지까지 의식한 행위이며 그만큼 거국적인 선언으로 성립시키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촛불항쟁의 경우에도 참여층의 일부는 시위의 문화축제 형식, 평화적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좀더 ‘투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화적 방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여겨진다. 깃발을 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비장한 운동가보다는, 유모차 끈 선량한 어머니들의 모습이 시민들 가슴에 더 불을 당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7) ‘근대’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특성과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고 모순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근대, 전근대, 탈근대를 넘나드는 것이 많이 있다.

8) “3.1운동 관계등조서·공판·재판기록” 원광대〈수요 동학공부모임〉자료

06

‘처형’으로서의 폭력

주로 약탈, 살육, 방화로 묘사되어온 민란의 실제 모습은, 앞서 밝은 것과 같이, 질서 있고 일정 절차에 따라 전개되었으며 또한 공론을 중시한 것이었다. 폭력을 쓰는 경우 그것은 ‘처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홍경래의 군대도 약탈을 하지 않았으며 농민의 물건은 돈을 주고 샀다(관서평난록; 최미정 1993, 21). 합덕농민항쟁의 경우 농민들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이정규가 도피하자 그의 남은 가족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집의 불을 끄고 부근 민가로 피난시켰다(박결순 2007). 금구 취당의 동학군은 ‘민간에 폐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내부 규율을 갖췄다(정창렬 1985, 129).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4대명의(名義)를 발표했는데 첫째가 불살인(不殺人)과 불살물(不殺物)이었다(배항섭 2013b, 336). 고분민란 중에 “동학은 대천이물(代天理物)하고 보국안민하며 죽이거나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탐관오리만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참가하는 사람들 수가 열흘 만에 수만 명에 이르렀다. 동학이 난민과 합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오하기문; 정창렬 1985, 133). 황현은 “민란에서는 감히 수령과 아전을 죽이거나 성지(城池)를 불태우거나 하지는 않고 오직 장대를 내세우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효유가 있으면 곧 평정된다. 고로 조야(朝野) 모두가 민란에 익숙되어 상사(常事)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황현, 『오하기문』; 정창렬 1985, 112). 민란이 일상사로 여겨졌다는 것은, 민란군이 주둔하고 있는 근방에 상인들이 모여들고 음식점, 잡화점이 생겨 장시를 이루었고 대단히 번성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정창렬 1985, 112).

박맹수에 의하면, 민란의 전개 양상은, 대체로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몽둥이와 죽창으로 무장을 한 수십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이 읍성을 습격하여 동헌을 점령한 다음, 해당 수령을 축출하고 인부(印符)와 향권(鄉權) 등을 탈취하는 한편, 감옥을 부수어 갇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삼정 즉 세금 장부를 불태웠으며, 수탈을 일삼던 향리(鄉吏)들을 구타하거나 잡아 죽이고, 해당 향리의 집을 부수거나 불태우며 재물을 탈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조정이나 상급 고을의 우두머리에게 해당 고을의 악정을 고쳐달라고 상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란에서는 지방 수령을 내쫓는 일은 있어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임금이 파견한 관리를 죽이는 것은 임금의 영을 거역하는, 즉 반역을 도모하는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박맹수 2015, 136).

이렇듯 민란군이 행한 폭력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이며 대체로 처벌이나 처형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즉 그들은 통치행위를 한 것인데, 통치의 기본은 ‘폭력의 독점적 사용’이다. 이들은 이를 일정 절차와 규율 즉 자신의 법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무장을 한 초군 주도의 민란은 악질 아전들의 집을 소각하는 등의 공격을 주로 했다(홍장희 1992, 9). 주로 부패한 이서배를 죽이거나 평판이 나쁜 양반, 지주의 집을 파괴, 방화했다(배항섭 2008, 35).

1869년 광양란을 일으킨 봉기군은 성을 점령하고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을 강화한 후 곧바로 “동헌으로 들어가 현감을 붙잡아 자신들의 거사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물었다.”(용호한록) 이는 난을 일으킨 이유가 관의 부당한 행위에 있음을 자인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인부(印符)를 빼앗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부정한 관을 대신하여 통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의 지도자 민회행은 부하들에게 “백성을 살해하는 자가 있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뺏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또한 “사창(社倉)을 부숴 쌓아놓은 쌀을 꺼내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쌀을 받아가라 하니 백성과 아낙들이 순식간에 뜰에 가득했다.” 민회행은 “궁핍한 시절에 배고픈 백성을 진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용호한록; 고성훈 2007, 129-130). 고부민란 당시 민중은 고부 군아를 점령한 후 아전들을 끌어내어 악정에 대해 엄중하게 취조하여 처벌했다. 이어 무기고를 부셔서 무기를 차지하고 수세로 거둔 양곡을 몰수하며 세곡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정창렬 1985, 109).

고성 주민들은 아전들의 부당 징세를 조사할 당시 이들이 두려워하여 피하려 하자 이들에게 조사만 하고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니 문서를 가지고 민회소에 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배항섭 2014, 119). 고성 주민들은 부정한 행위를 일삼은 아전의 집을 공격하면서도 “삼가해서 황씨 아전의 집에는 침범 말라”고 하여 일절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황씨는 “본래 순박하고 부지런해서 별로 걸려든 화란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불 태운 25호의 집은 “아전이나 백성들을 따질 것 없이 가난한 집은 없습니다”라고 보고되었다. 향유들조차도 불탄 집의 사람들은 “대개는 평일에 자초한 단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소민들은 “전일에 요임을 맡아 행학(行虐)하여” “공분을 사고 있던 자”들이라고 했다(고성부총쇄록; 배항섭 2014, 116).

동학 지도자들은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이다(보국안민).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오하기문; 배항섭 2016, 15).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에 공감하여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였고 열흘 만에 수만명이 모여들었다(오하기문; 배항섭 2016, 15).

07

한국적 특징으로서의 민란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민중항쟁이 활발했던 이유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더 유교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있다. 알렉산더 우드사이드에 의하면, 18세기 무렵 인구가 700만~800만이었던 조선이 600개가 넘는 서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인구 대비 서원의 밀도란 면에서 같은 시기 중국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이었다(배항섭 2013a, 258-259).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엘리트 비중이 중국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신사'의 경우 그 수가 급증한 태평천국 이후에도 총 인구 대비 1.9% 였는데 이에 비해 조선의 '양반'은 19세기에 들어와 60-70%까지 확대됐으며 18세기 초반에도 이미 10%를 상회했다(배항섭 2013a, 259).

일반 백성들의 교육열도 매우 강했다. 평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사랑채, 문간방, 재실, 행랑 등이 곧 서당이 되었으며 19세기에 서당의 수는 매우 많았다. 1860년대 전라도 임자도와 지도에도 각각 10여 개에 달하는 서당이 있었고, 어부나 수군의 자제들도 시문에 대한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같은 서당의 수와 양반되기의 열풍으로 1879년의 과거 응시자 수가 21만 명을 넘어섰다(정진영 2015, 160).

한문이 어려워 공부할 수 없었다면, '한글'이라는, 통합과 소통의 강력한 수단이 민을 결속시키는 훌륭한 무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체로 문자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민주주의가 어렵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덜 민주적'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한글과 같은 쉬운 문자의 부재가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SNS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난에 일반 평민들이 대거 동참한 것은 그 명분을 공유하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글 때문이다. 민란에서 국문 가사가 지어지고 널리 외어졌다는 기록이 드물지 않다(최미정 1993, 5). 천주교와 동학의 급속한 성장도 한글로 된 경전 덕분이다(정병설 2008, 155). 그 이전 민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란을 다룬 『신미록』의 독자들이 바로 민중봉기의 주역이었다. 신미록 간행 다음 해에 진주민란이 발발했고 19세기는 민란의 시대 자체가 되었다. 한글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하층 계급에까지 퍼져나갔고 공간적으로도 전국으로 흘러갔다(정병설 2008, 157).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수단과 더불어, 상상력을 좀더 가진다면, 도구나 지리적 요소 등 하드웨어적 특징도 민주항쟁의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토크빌도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음의 생태학』의 저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주체의 범위를 피부의 경계로가 아니라 도구, 환경을 포함하여 더 넓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죽창을 든 농민, 흰 옷을 입은 백성, 화염병을 든 학생, 넥타이를 맨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여성 등. 그리고, 해변으로 내몰린 동학군과 만주로 탈출하는 독립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시민들과 방 안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 이러한 도구, 환경, 공간과 더불어 시간도 주체의 의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즉 자신이 속한 역사, 이야기와 그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적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샤를르 달레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조선 사람들은 천성이 돌아다니기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고 했다(정병설 2008, 159). 헐버트는 중국인은 경제에, 일본인은 군사에, 한국인은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한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인은 이야기, 문화, 소통에 능했으며 이것이 민주항쟁의 큰 힘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⁹

9) 그 밖에, 하라 다케시는 『직소와 왕권』에서 조선이 중국, 일본에 비해 왕과 백성의 간격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경제적인 해석, 구조적 또는 계급적 해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논외로 했다.

08

나가며

‘정의가 구현되었는가’는 플라톤 이래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물음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바로 정치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볼 때 수령의 학정을 따져 묻고 그들의 재산을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정의의 구현이며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점에서 바로 통치행위이고 따라서 민치의 실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란은 데모크라시이다. 게다가 동학은 척왜양, 보국안민의 구호를 외쳤으므로 국방, 외교 문제까지 관심을 가졌으니 진정한 통치행위를 했다고 여겨진다.

실상, 민란의 역사는 조선시대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고려시대 신분제 타파를 목적으로 발발한 망이·망소이의 난, ‘고관대작이 천민, 노예에서 많이 일어났다,’ ‘대장이나 정승이 본래 종자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한 만적의 난이 그 예이다. 당시 실제로 천민이나 노비가 관리로 되는 경우도 많았다. 즉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부당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라는 ‘민주적’ 생각은, 유교의 조선이 세워지기 전부터 한반도에 있었다. 평등 의식은 자연적인 것이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원숭이도 차별을 받으면 화를 낸다.

2016년 가을에 일어난 ‘촛불’을, 우리는 현재 ‘항쟁’으로 또는 ‘혁명’으로 부르지만 당시 주로 사용된 용어는 ‘집회’였다. 또한 우리가 현재 ‘민란이 일어났다’고 말한 당일, 민란의 주동자는 일기에 ‘항회가 열렸다’고 썼다. 성공한 난리는 혁명이요 실패한 난리는 말 그대로 난리가 된다. 민란이 난리가 되고 항쟁이 혁명으로 불린 것은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성공과 실패 여부는 역사의 심판에 달린 것이다. 이제 민란의 명예회복을 시킬 때이다.

참고문헌

- 고성훈. 2007. “1869년 광양란 연구” 『사학연구』 85
- 김대중. 2011. 『김대중 자서전』, 삼인
- 김정인. 2018. “한국 민주주의, 어디서 왔는가” 6.10항쟁 31주년 기념학술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학재. 2017. “김대중의 평화사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인의 평화사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 박결순. 2007. “1894년 합덕 농민항쟁의 동인과 양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 박맹수. 2015. “동학계 신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 38
- 방용식. 2017. “재지사족의 체제이반과 1862년 진주민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 배항섭. 2008. “조선시대 민중의 시위 문화” 『내일을 여는 역사』 33
- 배항섭. 2013a. “임술민란의 민중상에 대한 검토” 『역사와 담론』 66
- 배항섭. 2013b. “19세기 후반 민중운동과 공론” 『한국사연구』 161
- 배항섭. 2014. “19세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공론의 대두” 『조선시대사학보』 71
- 배항섭. 2016.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정 고찰” 『역사와 담론』 79
- 송찬섭. 2002. “1890년 함창농민항쟁의 성격” 정만조 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 안병욱. 1987.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 『역사비평』 1987. 9
- 우윤. 2003. “1892~93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충북학』 5
- 정병설. 2008. “조선후기 한글 ·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 정진영. 2015. “사족과 농민” 『조선시대사학보』 73
- 정창렬. 1985. “고부민란의 연구 (하)” 『한구사연구』 49
- 최미정. 1993. “1800년대 민란과 국문시가” 『성곡논총』 24
- 홍장희. 1992. “대원군 집정기의 민란에 대한 연구” 『경주사학』 11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의 '민란'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8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